

Today's News Clip

#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도청 을지훈련장 직원 격려	1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의회 을지연습 현장 방문	1
江原日報	21면	강원FC 운영 현황 확인	2
강원도민일보	20면	도의회 예결위·강원FC 환담	2
亞洲經濟	온라인	강원도의회 이무철 예결위원장,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와의...	3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반도체 인재 양성 전략 세워야	4
江原日報	16면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대회	5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박호균 (강릉)도의원	5
江原日報	21면	[동정] 지광천 도의회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평창)	5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지광천(왼쪽)·최종수 (평창)도의원	6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지광천.박호균.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6
강원도민일보	01면	내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동해안 긴장	7
강원도민일보	02면	김진태 지사, 일 오염수 해양방류 대책 논의	7
강원도민일보	03면	"동해 경제권 몰락 막자" "거짓 선동 말라" 도내 여야 공방	8
강원도민일보	04면	동해안 어업인 오염수 방류 생계 직격탄 정부대책 촉구	8
강원도민일보	04면	도, 내일부터 자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매일 실시	9
강원도민일보	08면	정부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해역 바깥 추가 조사"	9
강원도민일보	02면	"교육공무직 뽑으라 할 땐 언제고..." 10억원 규모 페널티	10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 우두택지 쓰레기 집하장 전무 골머리	11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 빅3도시 고용률 나란히 도내 최하위권	11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 5개 시군 국가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도전장	12
江原日報	01면	GTX-B 춘천 연장 확정 연말로 또 미뤄져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총선 선거구 '면적특례' 설득력 있다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원전 오염수 현실화 악영향 우려	14
江原日報	19면	[사설] 서울~태백 준고속열차, 폐광지 '성장엔진'으로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道, 민간 일자리 비중 전국 최하위권 벗어나자면	16

## 강원도민일보

2023 08 23 ( )  
22

도의회 도청 을지훈련장 직원 격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가 22일 도청 충무시설을 찾아 을지훈련 상황을 보고 받고 과일과 라면 등을 전달했다.

## 江原日報

2023 08 23 ( )  
02

강원자치도의회 을지연습 현장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2일 을지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도청 충무시설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승선기자

## 江原日報

2023 08 23 ( )  
21

**강원FC 운영 현황 확인**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예결위원장실에서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와 환담을 갖고 강원FC 구단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8 23 ( )  
20

**도의회 예결위·강원FC 환담**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예결위 위원장실에서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와 환담을 갖고 구단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무철 위원장은 “구단의 위상을 높이고, 강원FC가 도민을 넘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구단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2023 08 22 ( )

## 亞洲經濟

### 강원도의회 이무철 예결위원장,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와 환담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예결위 위원장실에서 강원 FC 김병지 대표이사와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강원FC 구단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 하고 도의회 예결위 차원의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무철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게 구단의 위상을 높이고 강원FC가 도민을 넘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구단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주경제=(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cwy@ajunews.com

# 江原日報

2023 08 23 ( )

19

바야흐로 첨단 기술 경쟁 시대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는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무회의와 신년사를 통해 반도체 교육 및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 인력에 대한 수요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고, 총 15만명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이를 위한 마이스터고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1만명 양성을 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기본방향'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수도권 대비 부족한 인프라 및 산업체 현황을 고려했을 때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반도체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고등학교부터 반도체 인재 양성 기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고교와 대학 및 기업의 연계를 통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 올 1월 도청-교육청-반도체 공

## 강원포럼

조성운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유대학 간 '강원형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 교육청 역시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학과 개편 사업을 진행했으나, 소수의 학급 수 증설에만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춘천, 원주, 강릉 같은 도시만 지원하고 있다. 국제적인 흐름과 정부 기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 반도체 인재 양성 전략 세워야

교육청의 학급 수 증설과 학과 개편 사업만으로 반도체 인력 수요에 따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고심해야 할 때다.

필자는 지역의 균등 발전 차원에서 삼척에 있는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를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다.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도계전산정보고를 전환했을 때 이점으로는 첫

째, 전산을 베이스로 하는 학과가 있어 전환에 용이하다는 점이다. 전산과 반도체는 학문적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타 학과에 비해 전환이 수월할 것이다.

둘째, 인근 대학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 차로 30분 거리에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인 강원대 삼척캠퍼스가 있다. 삼척캠퍼스에는 반도체 관련 유사 학과가 있어 긴밀한 연계 협력이 가능, 고교와 대학 상호 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 서로의 교육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견지명의 자세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삼척시와 도교육청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한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미래 먹거리는 강원자치도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편익주의식으로 춘천, 원주, 강릉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이 강원자치도의 미래 세대를 위한 100년 사업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삼척의 도계전산정보고를 반도체 인재 양성의 신(新)거점 기지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다.

江原日報 2023 08 23 ( ) 16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대회** 제10회 강원특별자치도파크골프협회 회장기 파크골프대회가 22일 화천군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23 ( ) 12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23일 오후 3시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농지·농업분과 워킹그룹 2차 회의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08 23 ( ) 21



◇지광천도의회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평창)은 23일 오후 3시 도청에서 열리는 농지·농업분과 워킹

그룹 2차 회의에 참석.

## 강원도민일보

2023 08 23 ( )  
15

(평창)도의회는 23일 오후 3시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농지·농업분과 워킹그룹 2차 회의에 참석한다.



지광천(왼쪽)·최종수

2023 08 22 ( )

## 江原日報

### [동정] 지광천·박호균·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지광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평창), 박호균 도의원(강릉)은 23일 오후 3시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농지·농업분과 워킹그룹 2차 회의에 참석.

최종수 도의원(평창)은 23일 오전 8시 평창 진부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진부면새마을회 계절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석.

2023 08 23 ( ) 01

# 강원도민일보

## 내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동해안 긴장

기상 조건 충족시 개시 예상  
해저터널로 원전 앞바다 방류  
정부 "국민건강 위협 땀 중단 요청"  
어업인, 수산물 기피현상 우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는 약 12년 만이다. 강원도내 어업인들은 오염수의 유해성 여부와 무관하게 수산물 기피 현상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약 134만t의 오염수가 대형 탱크 1000여 개에 보관돼 있다. 방류기간은 30년 정도 걸릴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자 동해안 지역도 소비급감에 따른 우려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2일 고성 대진항 수산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씨는 "지금도 손님이 없는데 방류 후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종합 보고서를 통해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

미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다만 IAEA 보고서는 "해양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 방류 시점을 공개하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원도내 동해안 6개 시·군에는 3542명의 어업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어획량은 1만6591t에 달한다. 삼척에서 횡집을 운영하는 A씨는 "안 그래도 요즘 장사가 안되는데 오염수 방류로 시민들이 생선을 기피할까 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정기권의 공방도 격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긴급의원총회를 소집,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를 열었다. 시민사회단체도 23일부터 시위와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월 2회 간격의 자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 주기를 일일 검사 체계로 전환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도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는 24일부터는 당초 격주로 진행하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일일 주기로 전환하고, 신규 방사능 장비 2대는 내달 중 순해성수수산자원센터와 수산자원연구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재훈·김덕형 >관련기사 3·4·8면

2023 08 23 ( ) 02

# 강원도민일보



김진태 지사, 일 오염수 해양방류 대책 논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강릉제2청사 집무실에서 정일섭 2청사 글로벌본부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관계자들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24일부터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매일 시행할 계획이다.

2023 08 23 ( )  
03

# 강원도민일보

## “동해 경제권 몰락 막자” “거짓 선동 말라” 도내 여야 공방

일 정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민주 대책위 발대식·규탄대회  
국힘 “정부 발목잡기” 공세 반박  
도정치권 총선 영향 예의주시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여야 정파별 입장이 배치되며 도정치권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동해안권에 민감한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자기 총선을 앞둔 도정치권도 이 같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우영)은 이날 춘천 세종호텔에서 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우영)이 22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강원도당 대책위 발대식을 갖고 정부 규탄 총력전에 나섰다.

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강원도당 대책위 발대식을 가졌다. 김우영 도당위원장은 “국제 협력과 시

민 노력을 바탕으로 민주당도 한 마음으로 싸워나가겠다”며 “동해바다의 경제권의 몰락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정권을 심판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선 해양투기 저지 중앙당 총괄 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서울 노원구를

국회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로알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민석)도 논평을 내고 정부를 향해 “일본의 해양투기 결정에 따른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보상액을 산정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 행사 국제소송을 진행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는 송기현(원주 을) 원내수석부대표와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 168명 중 155명이 참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어 울리며 대대적인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감시체계, 현장 모니터링 강화에 방점을 찍으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해 ‘괴담 정치’, ‘거짓 선동’을 주도하고 있다며 여권의 공세를 전면 차단하고 나섰다. 이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들께서는 이미 방류를 고리로 한 근거 없는 선전·선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모두 알고 계시다”며 “민주당이 집단 집회를 여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지자, 반일 감정을 앞세워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부정적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이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세훈·이철화

# 강원도민일보

2023 08 23 ( )  
04

## 동해안 어업인 오염수 방류 생계 직격탄 정부대책 촉구

주민, 수산물 판매 감소 우려  
“국민 대다수 이미 해산물 공포”  
반대 춘천시민연대 출범 예정

일본이 오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기로 하자, 어업인과 음식점 관계자 등 도내 동해안권 주민들은 ‘수산물 소비 급감’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어업인들은 수산물 소비 감소와 바다 생태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남 도연승어업인연합회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당연히 불안하고, 방류 후 수산물 판매가 저감될 경우 생존권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방류가 될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22일 박구연(사진 가운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한일 양국간 협의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 대응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상준 속초 대표동 A회집 대표는 “아직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원산지가 어디냐고 묻는 손님들도 많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일본산은 받지 않을 계획이지만 이미 국민 전체에 해산물에 대한 공포감이 만연해 있어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직접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공포감이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해철 속초시수협조합장은 “최근 도내 조항장과 국내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는 곳을 다녀왔다”며 “철저한 검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

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매스컴을 통해 불안감이 너무 많이 고조됐다는 점”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전병성 삼척시정치참여의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지점과 우리 동해바다와 거리가 적지 않고 광활한 바다에서 대부분 희석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직접적 피해는 크

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춘천지역 시민단체 10여곳으로 구성된 춘천공동행동은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기 위해 ‘핵오염수 반대 춘천시민연대’를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다. 수협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챌린지’를 진행해왔고, 우리 수산물 지키기 운동본부를 발족해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365일 소비합시다’라는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수협 중앙회는 조만간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예산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린 1750억원으로 편성한 상태. 또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 위축이 되지 않도록 소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총합

2023 08 23 ( )  
04

## 강원도민일보

## 도, 내일부터 자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매일 실시

## 오염수 해양방류 관리 강화

## 내달 방사능 장비 2대 도입

속보=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월 2회 간격의 자체 수산물방사능검사주기(본지 7월 11일 1면)를 일일 검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것이다.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매일 시행하는 등 방사능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신규

방사능 장비 2대는 내달 중순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수산자원연구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는 24일부터는 당초 격주로 진행했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일일 주기로 전환한다.

검사대상은 도내 수산물 위판장 및 양식장 생산단계 수산물이다.

검사항목은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는 도 홈페이지 및 언론사를 통해 즉시 공개된다. 이를 통해 도는 강원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안심

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진태 도지사는 22일 글로벌본부에서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김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아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확대 및 촘촘한 방사능 검사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보건환경연구원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선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방사능 검사 162건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덕형

## 강원도민일보

2023 08 23 ( )  
08

## 정부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해역 바깥 추가 조사”

## 일 오염수 방류 초기 선제 조사

##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 10곳

## 일본 인근 공해상 8곳서 진행

정부는 오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개시됨에 따라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양 확산 시물레이션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방’ 브리핑에서 이같은 향후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200개 정점(조사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박 차장은 “정부는 모니터링 범위를 우리 해역 밖으로 대폭 넓혀 방류 초기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영역이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먼저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는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류와 연결된 북적도 해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정점에서 내년부터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태평양도서국과 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해양 방사능 공동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는 해

류흐름을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00~1600km 떨어진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진행된다.

박 차장은 “공해상 조사는 지난 4월 시범조사 이후 6월부터 매일 실시 중”이라며 “기상 여건상 출항이 어려운 겨울철(11~3월)을 제외하고는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방류 후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 확산 시물레이션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시물레이션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보다 높은 수준의 현실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도쿄전력방류계획을 기반으로 수행해 지난 2월 발표한 ‘삼중수소 확산 시물레이션’ 결과, 방류된 오염수는 4~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돼 10년 후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방류 후 관련 데이터를 지속 점검해 △일본 측이 공개할 실시간 정보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이상 상황 발생 여부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 강원도민일보

2023 08 23 ( )  
02

## “교육공무직 뽑으라 할 땐 언제고...” 10억원 규모 페널티

도교육청 2502명 정원초과 기록  
교육부 산정기준 대비 가장 높아  
올해 11억4523만원 매년 증가  
“강제 구조조정 못해” 전전공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현원이 정원보다 많아 매년 교육부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페널티를 부담 중 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무직을 채용했는데 후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단위:명)  
2017~2023 교육공무직 정·현원 현황

연도	구분	인원	연도	구분	인원
2017	정원	5628	2021	정원	5650
	현원	6871		현원	8028
2018	정원	5672	2022	정원	5587
	현원	7976		현원	7965
2019	정원	5743	2023	정원	5439
	현원	8032		현원	7941
2020	정원	5791			
	현원	8133			

22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은 5439명이다. 반면 현원은 7941명으로 2502명 더 많다.

지난 2017년 6871명이던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숫자는 2018년 7976명으로 1105명 늘어난 뒤 매년 증가, 지난 2020년 813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1년 8028명, 2022년 7965명, 2023년 794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정원이 5650명에서 5439명으로 더 크게 줄어들며 정·현원 간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

결국 교육부가 승인해준 교육공무직 정원에 비해 도교육청이 고용한 교육공무직이 과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는 과원으로 인한 페널티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10억3389만원이던 페널티는 지난해 10억9206

만원을 기록한 뒤 올해는 11억4523만원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교육부를 통해 지원받으나 페널티로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스스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페널티만큼 교육부 지원이 줄어들고, 빠진 부분에 교육청 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과원 상황은 교육부로부터 현원 대비 기준인원(정원) 비율을 산정 받는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등 8개 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

계자는 “지난 2022년에는 교육부에서 산정한 기준인원 대비 현원 비율이 8개 도교육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정원과 현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마땅한 해결 방법도 없고, 과거에는 정부차원에서 교육공무직 채용을 적극 권장하더니 이제 와 이후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며 전전공금 공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교원 잡무를 경감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공무직 적극 채용이 이뤄졌는데, 이제와서 강제로 구조조정 할 수는 없다”며 “자연감소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민영

# 강원도민일보

## 춘천 우두택지 쓰레기 집하장 전무 골머리

도로변 투기로 악취 등 불편  
민원 증가·주민간 갈등도  
시 “설치 장소 지정시 지원”



춘천시 우두동 신축아파트 앞 상가·주택단지 인근. 이곳은 쓰레기 집하장 부재로 인근 주민들과 상가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방치된 쓰레기들이 대로에 널브러져 있다.

춘천시 우두동 상가·주택단지 주민들과 상인들이 쓰레기 처리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식당 주인과 건물주가 다툼을 벌여 행정복지센터가 중재에 나서는 등 쓰레기 문제가 주민간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우두택지 일원에 상가와 주택들이 잇따라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거주민들이 증가하자 쓰레기 문제로 인한 불편과 갈등이 심화됐다. 2021년 7월 2만 3090명이던 신사우동 지역 인구는 2022년 7월 2만 4860명, 올해 7월 2만 5562명으로 2년새 10.7%(2472명) 늘었다.

우두택지 상가·주택단지에서 2년간 카페를 운영한 최모(60)씨는 “장사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쓰레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곧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는 쓰레기 수거 차량도 오지 않아 난장판이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쓰레기를 모아두고 있는 대로변은 투기된 음식물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오물이 인도에 스며들어 얼룩덜룩하고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지역에 쓰레기 집하장이 없는 데다 신사

우동 일원이 도농복합지역으로 외곽에 위치한 점, 시민의식 부재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인근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44)씨는 “쓰레기를 버리려면 대로변까지 가는 것도 불편하고 최근 날씨가 더워져서 벌레도 꼬이고 냄새까지 지독해 죽겠다”며 “해지면 고양이들이 내려와 쓰레기를 헤집어두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버리는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오물과 악취는 더 심하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폐가구를 던져놓고 간다든지 검정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투기한다든지 이런 시민의식이 결여된 행위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부터 조금씩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쓰레기 문제로 건물주와 식당주인이 크게 싸워 중재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다”며 “정해진 시간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대로변에 내놓는 것이 시에서 내려온 지침 사항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집하장의 경우 재산권 문제가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 시에서 직접 지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쓰레기 집하장 위치를 선정한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혁

# 강원도민일보

## 강원 빅3도시 고용률 나란히 도내 최하위권

<춘천·원주·강릉>

### 1위 화천, 청년·고령층간 격차 커

춘천, 원주, 강릉 등 강원지역 빅3도시의 고용률이 도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춘천은 3년 연속 고용률 최하위로 불명예를 안았다.

22일 통계청의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보면 강원지역에서 춘천의 고용률 60.9%로 가장 낮았으며, 원주(61.0%), 강릉(61.4%) 등의 순으로 빅3도시 모두 최하위권에 속했다. 특히 춘천은 2020년

상반기부터 최하위였으며 전년 동기(58.4%)대비 2.5%p 상승했으나 벗어 나지 못했다. 원주는 실업률이 3.0%를 기록했고, 2021년 하반기 이후 실업률 1위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더 적은 지역은 원주로 확인됐다. 원주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18만명, 거주지 기준 취업자가 19만 3000명으로 1만 3000명 차이가 났다. 원주에 살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더 많기에 생산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릉은 취업자가 지난해 하반기(-3.4%)에 이어 올해 상반기 -0.6%로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졌다.

반면 강원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천(7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인 춘천과 비교하면 12.7%p나 차이가 났다. 하지만 화천의 경우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률 격차가 컸다. 화천의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72.1%로 도내 1위를 차지했으며 최하위인 원주(37.0%)와 비교해 35.1%p, 2배 가까이 벌어졌다. 반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31.6%에 불과하며 강원 지역 최하위였으며 고성(57%)과 비교해 25.4%p 낮았다. 정우진

2023 08 23 ( ) 01

# 강원도민일보

## 강원 5개 시군 국가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도전장

###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평창

바이오산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내 지자체들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에 도전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오산업 기반을 갖춘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평창군이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신규 바이오 특화단지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동물세포와 인공장기(오가노이드) 등 바이오 의약품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7월엔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올 하반기 신규 공고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는 신규국가첨단전략기술인 동물세포와 인공장기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각 시·군에 특화단지 유치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 여부와 확장성·단지 조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지로 최종 선정, 제출하게 된다”고 했다.

춘천시는 바이오산업진흥원과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을 중심으로 체외진단과 항체 및 의약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주시는 의료기기 및 바이오 헬스 분야에, 홍천군은 국가항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 강릉시는 천연물바이오 분야에 평창군은 그린 바

이오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도내 특화단지 유치 경쟁은 달아오르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은 20년간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왔다. 작년엔 시내 바이오기업 매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며 “입지 선정과 정주여건, 산업육성 계획 등을 다루는 신규용역을 진행한다”고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4만 5000㎡ 규모로 조성 중인 국가항체클러스터 단지에 건물 두개 동이 올해 준공되고, 연구기관과 벤처기업 입주 예정에 있다”며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특화단지 유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형

2023 08 23 ( ) 01

# 江原日報

## GTX-B 춘천 연장 확정 연말로 또 미뤄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강원 철도 사업 1순위 불구 지연... 김 지사 “국토부 장관 만날 것” 道,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 반영 노리는 핵심 계획안 10개 추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2026~2035년) 신규 반영을 노리는 핵심 철도 사업 10개를 추려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다만 강원지역 철도 사업 중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의 확정 여부 발표는 연말 또는 내년 초로 또 다시 미뤄져 애를 태우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전 수요조사를 벌였으며 10개 신규 철도 사업이 추려졌다. 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에 신규 사업과 우선 순위 등을 전달하고 전국적인

경쟁에 대비해 사업 필요성을 적극 어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6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빠른 것으로 2025년 확정될 전망이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철도망 계획에 사업이 반영돼야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의 추진이 가능하다.

강원지역 1순위 후보 사업은 GTX-B 춘천 연장과 원주~춘천 내륙중단철도가 꼽히며 강원남부권과 폐광지를 관통하는 제천~삼척 고속화철도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이 밖

에 GTX-A 원주 연장, 춘천~철원 철도, 연천~월정리 전철화, 신금강산선 철도, 평창~정선 철도, 포천~신철원 철도, 백마고지~군사분계선이 있다. 다만 GTX-B 춘천 연장 확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당초 국토부는 올 6월 GTX-B 춘천 연장 등이 담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GTX 통합기획 연구용역이 지연될 경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스케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9월 중 국토부 장관을 별도로 면담해 GTX-B 춘천 연장을 확실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3 08 23 ( )  
/ 19

## 총선 선거구 '면적특례' 설득력 있다

-철원·화천·양구, 서울의 4배... 춘천 분구 마땅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은 지역 정서가 다른 행정구역을 한데 묶는 선거구에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여러 개 시·군을 합하는 선거구는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선거 편의를 위한 '짜깁기' 식 결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 특히 춘천 선거구의 경우 인근 4개 지역과 함께 묶여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이런 불합리한 구도를 개선해 유권자가 수긍할 수 있는 선거구로 치러져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시 지역의 면적을 고려하자는 '면적 특례' 적용 주장이 있습니다. 인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선거구는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비수도권 농어촌을 대변할 국회의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 기준 선거구로 인해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춘천과 인근 접경지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철원·화천·양구의 면적은 총 2500km<sup>2</sup>로, 서울의 전체 면적(605km<sup>2</sup>)보다 4배가 넘습니. 하지만 춘천과 함께 묶여 지역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 시 면적과 시군 지자체의 수를 고려해야 마땅합니다.

면적 특례 주장은도 국회의원 사이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면적 특례를 넣는 방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며 춘천 단독 분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인 박정하 원주갑 의원도 지역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춘천 선거구는 두 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인구 범위 상한 초과 선거구는 전국적으로 18곳에 달합니다. 이들 선거구 중 11곳이 춘천보다 초과 인구수가 많아 춘천 단독 분구는 쉽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면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춘천 단독 분구의 명분도 충분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하나의 시(市)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붙일 수 없게 했지만, 국회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춘천 선거구에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모순된 선거구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8 23 ( )

/ 19

## 원전 오염수 현실화 악영향 우려

-주변국 피해 야기 일본 책임 지도록 촉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방사능 오염수가 전격적으로 내일(8월 24일)부터 바다로 방출키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세계적인 초유의 일이며 해양 방류 파장을 둘러싸고의 견해 온도차가 있지만, 국민과 국가에 긍정적이지 않은 일본 정부의 처사기에 방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 처사에 대해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방류가 이뤄졌을 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정부 설명과 달리 해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어업인 피해가 가속화될 수 있어 실질적인 구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어업계 일각에서 “방류 후 수산물 판매가 저감될 경우 생존권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염수 방류 파장으로 소금값 급등과 수산물 소비 감소를 몸소 겪었기에 대부분 어업인은 타격을 우려하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우려하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투쟁 역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사고 이후 10여년 간 축적된 방사능 오염수를 무려 30년 동안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기에 더 심각하게 여깁니다. 인체와 환경 영향에 직접적인 삼중수소 등이 포함된 방사능 오염수를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일본 자국 내 육지에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으로 흘러보내 주변국과 해양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 측은 자국 어업인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만전의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지만, 가장 가까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수산업계 및 해양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서 납득이 어렵습니다. 수산업은 물론 해양 산업 비중이 큰 동해안권 주민들은 생계와 생존이 달린 사안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주변국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전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 江原日報

2023 08 23 ( ) / 19

## 서울~태백 준고속열차, 폐광지 ‘성장엔진’으로

서울~태백 2시간대 신형열차 운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역 발전 플랜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다. 9월1일부터 서울 청량리~영월~정선(사북)~태백~삼척(도계)~동해 구간에 신형열차 EMU-150이 도입된다. 운행이 안정화되면 서울부터 영월까지 1시간대, 태백은 2시간대에 열차 운행이 가능하게 돼 ‘폐광지 교통혁명’이라는 평가다. 시속 150km의 준고속열차인 EMU-150은 서울 청량리역과 영월역, 정선 사북(민동산역), 태백역, 삼척 도계역, 동해역 등을 일일 2회 운행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EMU-150과 연계한 폐광지역 시·군 발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다. 즉, 준고속열차 특수를 창출해 내야 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폐광지역의 다방면에 걸친 긍정적 효과가 전망돼 지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우선 폐광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레저 인구의 접근도가 크게 향상됨으로써 그간 교통 불편으로 인해 묻혀 있던 폐광지역의 관광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남부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뛰어넘어 도 전체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동안 ‘관광 입도’를 지역 발전의 슬로건으로 내건 강원자치도의 입장에서는 호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

은 아니다. 여러 여건에서 수세적 입장에 놓여 있는 지역으로서 이 같은 접근성 강화가 되레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면 오히려 ‘빨대 효과’ 등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폐광지역 준고속열차 시대에 걸맞은 지역 나름의 대비책이 나와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차원에서 도와 태백시 등이 서울~태백 간 운행 시간을 2시간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 열차 운행 안정

화 및 태백선 노선 개량, 기차역 조정,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선 직선화 등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은 시의적절하다. 여기에다 관광 특수를 창출

### 9월1일부터 2시간대 운행 ... 일일 2회

관련 자치단체,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역세권, 대중교통과 잘 연계돼야 ‘시너지’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적극 제시돼야 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주변 지역들과의 연계망도 시급히 확충돼야 할 것이다. 준고속열차가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되려면 지역 대중교통수단과 잘 이어져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과제들을 떠올릴 때 폐광지역 관련 자치단체들은 준고속열차 특수 극대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역할은 막중하다. 역 주변의 정비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관광자원의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조성 과 국내외 홍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폐광지역의 준고속열차 운행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江原日報

2023 08 23 ( )

/ 19

## 道, 민간 일자리 비중 전국 최하위권 벗어나자면

강원지역은 민간 일자리가 부족하고 평균 임금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처음 발표한 BOK 강원경제 메모 '강원지역 기초자치단체별 민간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비 경제활동인구(2023년 5월 기준) 중 강원지역 민간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4%다. 이는 17개 시·도 평균인 45.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인 16위다. 도내 민간 일자의 평균 임금도 262만원(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023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민간 일자의 질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저임금의 일자리는 불안정한 취업, 저임금에 대한 불만, 노동시장 퇴장이라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다. 공공 일자리는 일시적일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기업에서 나온다. 도내 청년층이 급감하는 것도 괜찮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지자체를 향해 기업 유치를 통해 좋은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물론

대부분의 시·군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기도 살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문제는 바이오·헬스, 반도체,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미래산업 위주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주로 수도권이나 충청권을 선호하는 것도 정주 여건과 풍부한 인적 자원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강원특별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도를 비롯해 각 시·군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전의 정책과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강원특별법을 활용해 기업 규제부터 확 풀어야 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은 기업의 조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기업을 불러오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에 불을 붙여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기업 유치→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확립돼야 한다. 또한 대학과 기업의 연계성 없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지역대학의 맞춤형 인재 육성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힘을 모아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다.